3주차 Engaged Learning 팀 활동 일지

조 이름: (해외조)

활동	일시	2023. 03. 16 (목)	기록자	전종혁
개 요	참석	박서은, 이지우, 이정민, 이준하, 전종혁		
	조사기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01. 설립 배경

한국국제협력단범 제1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02. 주요 업무



한국국제 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사업, 개발컨설팅,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3.결산 내역 (세부 내역: https://alio.go.kr/download/download.json?fileNo=2743283) 사업유형별 봉사단파견 민관협력 소규모 무상원조 국제기구협력사업 행정성 경비 개발인식증진 인도적 지원 총 지원실적 세부내역 분야별

04. 관련 최근 이슈

사호

비리 고리 못 끊은 코이카..."독립성·투명성 높여야"

2023년 02월 15일 05시 22분 댓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코리아에이드' 추진 코이카 내세웠지만…최서원 '미르재단'이 주도 이후 코이카 혁신위원회 출범…"노동이사제 도입" 더딘 약속 이행…노동이사 선임 지난달에야 마쳐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150522555749

♠ > 뉴스 > 브리핑룸 > 보도자료

정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인도적 지원 제공

2023.02.07 외교부

+ - □ =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도 17일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긴급구호대 2진은 외교부 직원 2명, 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수 소속 의료팀 10명, 한국국 제협력단(KOICA·코이카) 직원 5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굿네이버스·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월드비전 소속 민간긴급구호단체 관계자 4명으로 구성됐다.

05. 기관 분석 후 느낀점

[타분야에 비해 적은 인도적지원 예산]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 국제구호활동에 있어서 세계 경제력 순위(2021년) 10개 나라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4개 나라가 2개 이상의 중앙·지방 정부 구조대를 파견했으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호주,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등도 2개 이상의 중앙·지방 정부 구조대를 파견하고 있다. 정부, 민간을 합쳐서 한 개의 구조대만 출동을 신고한 나라는 위의 10개 나라가운데 캐나다를 빼고 대한민국 혼자이다. (캐나다는 구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이러한 해외 주요재난 현장과 같은 국제구호활동은 주로 인도적지원예산이 편성되지만 코이카의 재무표에는 2020년 기준 총예산의 0.9% 만이 편성되어있으며 이는 행정성 경비의 1/11 수준이다. 따라서 코이카의 설립목적인 국제협력 증진의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도적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 편중된 국별 협력사업]

국별협사업은 예산의 약 반절을 차지하는, 코이카 내 가장 비중이 큰 협력사업이다. 지역별 예산표를 참고했을 때 2020년 기준 아프리카 42%, 중동 21%, 중남미 5.9%, 아시아 6.%등 아프리카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주변국가인 아시아에 대해서는 대륙별 크기와 인구 수를 놓고 보았을 때 사실상 가장 적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아프리카의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있지만 가장 가까운 아시아 대륙의 협력사업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율성과 타당성을 놓고보았을 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독립성 제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의 간섭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한국국제협력단은 과거부터 소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코리아 에이드" 추진에 있어 최서원씨의 '미르재단'이 주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송모씨가 인사혜택을 대가로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조원이라는 결코 적지않은 예산을 다루는 한국국제협력단에게 있어 인사제도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